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전문에 담겼다

문대통령 26일 발의 개헌안... '부마항쟁' '6·10항쟁'과 함께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일제때 용어 근로→노동 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 6·10 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담겼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3면>

전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지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으며 대통령 개정에 감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19 혁명, 부마항쟁, 6·10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를 담은 전문에 명기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

의 정통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문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에는 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합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행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 세월호 참사와 문지마 살인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또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 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특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 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B 영장판사 영암출신 박범석 ▶2면

전라도 1000년 인물-김환기 ▶18면

KIA, 2연패 위한 불 밝혔다 ▶20면

김영록·신정훈·장만채 '3자 구도' 이뤄질까

조용필·레드벨벳 등 4월 초 평양 공연



윤상-현승월 남북 예술단 만남 20일 오전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예술단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윤상(오른쪽) 음악감독과 북측 대표 현승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뉴스초점

민주 전남지사 경선 변수

이개호 의원 '후광' 누가 받아
동부권 표심 어디로 갈까 관심
장만채 입당 성사 여부도 촉각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전이 새판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의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이 민주당에 입당을 신청, 경쟁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장 전 교육감이 이 대열에 합류해 3자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가 경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이 의원과 노 전 시장 불출마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가 볼지도 경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만채' 입당 되나=일반적으로 공당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인사가 아니고는 입당이 거부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평소엔 사소한 일도 공천을 앞두고는 큰 흠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정치권의 상황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장 전 교육감의 입당 문제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개호' '노관규' 후광은 누가 받아=일단, 이 의원의 공개적으로 엄정 중립을 외치고 있다. 특히 도당위원장이어서 마음이 있어도 한 후보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가장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이 의원의 내심을 보일 경우 적잖은 영향력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이 의원이 정서상 같은 공무원 출신인 김영록 전 장관을 지지할 것인 관측이 있다. 전남도부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을 한 경력도 많아 많은 교감을 가졌을 것인 예상이 덧붙여진 분석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지난해 전남도당위원장을 하려할 때 김 전 장관이 도전을 해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던 전력과, 같은 공직자 출신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지지하기 어려울 것인 분석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노 전 시장의 불출마는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 전 교육감의 입당 여부와 맞물린 변수다. 노 전 시장은 전남 동부권 표심을 노리고 전남지사 선거를 꿈꿨다. 따라서 장 전 교육감이 입당 시 노 전 시장 불출마 효과를 가장 많이 가져갈 것인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이 거부될 때는 동부권 표심을 나머지 후보가 나눠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 전 비서관에 약간 유리할 것인 분석이 있다. 시장 출신인 신 전 비서관이 동부권 시장·군수에 더 우호적 반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광역단체장 경선 4월 22일까지 마무리

과열지역 광주서 시작 서울로

내일~24일 후보자 서류접수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서류접수를 받는다. 또 경선은 광주 등 과열 우려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 다음달 22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성호 공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2일간 공고하고 3일간 후보접수를 하기로 했다"면서 "내일 2차 회의를 열어 심사 기준, 방법, 전체 일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류접수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의 일정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전략공천 내지 단순공천 지역

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다음달 22일까지 경선을 진행해 후보 선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선 일정은 광주시와 충남도 등 과열 우려 지역에서 시작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므로 그 전에 경선 등의 일정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전략공천 내지 단순공천 지역

당을 막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논란이 있는 일이 있다고 하니 그것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그 일이 당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분들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체성을 살린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장 전 교육감의 입당엔 전남도당위원장으로 복귀한 이개호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이 당을 위해 전남지사 출마를 포기하면서 당 내에서 입지가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 위원장은 "당원 뜻에 따르겠다"며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는 불출마 선언 전에는 장 전 교육감의 정체성 문제를 들어 입당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당 일각에서는 정체성 문제로 공천장을 주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입당까지 거부하는 것은 열린 정당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개호' '노관규' 후광은 누가 받아=일단, 이 의원의 공개적으로 엄정 중립을 외치고 있다. 특히 도당위원장이어서 마음이 있어도 한 후보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가장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이 의원의 내심을 보일 경우 적잖은 영향력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이 의원이 정서상 같은 공무원 출신인 김영록 전 장관을 지지할 것인 관측이 있다. 전남도부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을 한 경력도 많아 많은 교감을 가졌을 것인 예상이 덧붙여진 분석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지난해 전남도당위원장을 하려할 때 김 전 장관이 도전을 해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던 전력과, 같은 공직자 출신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지지하기 어려울 것인 분석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노 전 시장의 불출마는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 전 교육감의 입당 여부와 맞물린 변수다. 노 전 시장은 전남 동부권 표심을 노리고 전남지사 선거를 꿈꿨다. 따라서 장 전 교육감이 입당 시 노 전 시장 불출마 효과를 가장 많이 가져갈 것인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이 거부될 때는 동부권 표심을 나머지 후보가 나눠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 전 비서관에 약간 유리할 것인 분석이 있다. 시장 출신인 신 전 비서관이 동부권 시장·군수에 더 우호적 반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로운 이름,

다스코 [DASCO]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로운 이름,

세라코 [CERACO]

새롭게 출발하는 **다스코(주)**와 **세라코(주)**는 축적된 기술력과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R&D를 통해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Total Solution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스코(주)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Tel : 061)370-2114, Fax : 061)370-8195
도로안전, 테크플레이트, 단열재, 외장재, 태양광

세라코(주) 전남 나주시 봉황면 농공단지길 134-7
Tel : 061)331-9000, Fax : 061)331-9003
세라믹벽돌, 친환경, 수처리, 도로안전, 테라코타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사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kr